

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의견서

관계기관명:	한국중견기업연합회
담당자:	박양균 정책본부장 / 02-3275-2991 / 010-9001-7889
법률안명:	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1.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검토의견 : 신중검토 필요

2. 구체적 검토의견

□ 「가맹사업법」 제2조의2(가맹점사업자의 의제)

- “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”간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경우, “가맹지역본부를 가맹점사업자”로 의제하는 것은 법 취지와 상반된 조치
- 가맹점사업자의 지원·관리를 위해 “가맹본부-가맹지역본부”간 계약관계에 의거 이미 진행되고 있는 바, 現 공정거래법*에 따라 가맹지역본부는 법적 보호 가능
 - * 공정거래법 제45조(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) : 부당한 거래거절, 부당한 사업활동 구속, 거래상 지위남용 등 공정거래법 제48조(보복조치의 금지), 제49조(시정조치), 제50조(과징금)
- 아울러, 「가맹사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가맹지역본부의 위반행위*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이 한계
 - *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 “가맹본부-가맹점사업자” 간의 계약에서 한정
- 현행법상 가맹지역본부의 위반행위는 가맹본부의 책임으로, 위반행위의 제재방법은 “계약해지” 또는 “손해배상”이 유일한 수단
- “가맹점사업자의 의제”를 통해 “가맹지역본부”는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제14조의 예외조항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가맹점사업자에 비해 “가맹지역본부”에 보다 더 강력한 법적 보호조치 부여하는 형태로 변모

□ 「가맹사업법」 제14조의3(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)제2항제3호

- 가맹점사업자단체(이하 단체)의 등록요건 中 단체를 구성하는 “구성원 자격·명부”만으로는 단체의 정당성 및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움.
-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 하에 가입된 “단체 가입증” 등 명확한 증빙서류*를 기반한 추가 장치가 필요
 - * 실질적 가입 여부 확인이 불명확한 명부를 통해 가맹점단체로 등록될 경우, 가맹본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혼란 초래
- 단체의 등록 사실 및 구성원 명부 등의 내용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 등록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절차 마련하여 가맹본부와 단체 간 혼란 방지

□ 「가맹사업법」 제14조의3(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)제3항

- 단체 등록 후 변경사항*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 모니터링 및 등록취소 절차 등의 구체적 대안책 마련 필요

* 가맹점의 양도양수·폐점, 가입의사 철회 등 최초 등록 사항 대비 변동가능성 ↑

□ 「가맹사업법」 제39조(권한의 위임과 위탁)

-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과중 완화를 위해 「가맹사업법」 제28조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업무에 “가맹점 단체 등록의 대행” 과업을 추가

- 공정거래조정원은 매년 “정보공개서 변경 등록*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, 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효율적 업무처리가 힘든 점을 감안할 경우, 추가 될 “가맹사업자단체 등록” 업무처리 기간이 지연 될 것으로 예상

* 「가맹사업법」 시행령 제5조의3(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)

- 現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대행 중인 가맹거래사에 “가맹점 단체 등록의 대행” 업무를 추가할 경우, 누락서류 방지 등 원활한 업무처리*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

3. 상기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상임위 의견개진 여부 : 없음